

무엇이, 왜 그들을...엄마·아빠 되기가 두려운 한국



초초저출산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했다. 결혼과 출산은 '2030 청년'에게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2030 청년들과 전문가들은 저출산 원인으로 높은 주거 비용, 돌봄 공백과 비용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공통으로 꼽고 있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1년 전보다 0.05명 줄어든 0.7명에 그쳤다. 혼인 건수 또한 늘지 않으면서 저출산 현상은 갈수록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2021년 평균(1.58명)의 절반도 안 되며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10년 동안 결혼과 출산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가치관은 급변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율은 절반도 안 되는 36.4%로, 10년 전(56.5%)과 비교해 20%포인트(p) 이상 떨어졌다.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청년의 응답률(53.5%)은 절반 이상을 넘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6월 월간 '보건복지포럼'에 게재한 '성역할 가치관과 결혼 및 자녀에 대한 태도' 보고서에도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는 응답률을 연령별로 보면 19~24세 여성은 55.0%, 25~29세 42.5%, 30~34세 31.8%였지만 40~44세 21.6%, 45~49세는 18.2%로 세대 간 차이를 보였다.

당사자들인 청년들은 치솟는 집값,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결혼한 서울 거주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주거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출산과 육아를 계획할 여유가 생긴다. 당장 매달 들어가는 전세 이자만 내는데도 벅찬 상황이라, 아이를 낳는 건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OECD평균의 절반 전문가 "주거 문제, 교육비 부담 등 구조 문제" 청년, '주거 문제' 지적... "일·가정 양립 어려워"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초반 미혼 여성 유모 씨는 "아이를 키우려면 적어도 배우자 한 명의 희생은 무조건 필요하다.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 지금의 커리어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아직은 커리어를 내려놓고 싶지 않은 마음이 크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에 참여한 2030 청년 219명은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들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10개의 주요 정책 분야 중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분야'를 물은 결과, 사전·사후 조사 모두 '주거 지원'이 1순위로 꼽혔다. 사후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주거 지원이 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 청년 대상 일자리 지원(9.1%)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높은 주택 가격, 경력 단절, 교육 경쟁 심화 등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젊은 층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설명했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뉴시스의 통화에서 "청년이 결혼하더라도 주거 문제와 일자리 문제 등 불안정함 속에서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한국사회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양육하고 키우는 것에는 결국은 돈이 많거나 조건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 결혼하기도, 아이를 낳기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도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원이 실시한 '2030 청년층 생애 전망 인식조사'에 따르면, 남



녀 모두 청년기 삶의 과업 중요도로 '일'이 1위, '개인생활'이 2순위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노동 중심 생애'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이다.

특히 여성들은 설문조사에서 '파트너의 적극적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 분담', '파트너의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사용' 등을 자녀를 갖기 위해 필요한 최우선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의 사유가 육아와 결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결혼, 임신·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은 지난해 139만7000여 명으로 이들의 경력단절 사유로 육아(42.8%)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결혼(26.3%), 임신·출산(22.7%) 순이었다.

연구진은 "청년 여성들에게 결혼과 자녀 갖기는 노동자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사건으로서 이들은 파트너가 그 위험을 적극적으로 나눌 때에만 자녀 갖기가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 쏟고 제도 만들고...그래도 안 낳는 이유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등 5대 핵심 과제 선정 전문가 '컨트롤타워 부재' '제도 확대 넘어 격차 줄여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8명을 기록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유례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도 예산으로 15조원을 투입하면서 저출산 해결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사회고령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부담 경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등 5대 핵심 분야로 선정해 내년도 15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2006년에 설립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6년 동안 4번의 걸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추세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해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 내년도 저출산 예산안 편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돌봄과 교육 1조3000억원 ▲일·육아 병행 지원 2조2000억원 ▲주거지원 9조원 ▲양육비용 부담 경감 2조9000억원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50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우선 정부는 0세 아동을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현행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기준 50만원으로 확대해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돌봄과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본인 부담금 10%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가구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한다. 시간제 보육 기관도 기존의 2배 이상 늘린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 휴직 급여 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해 일과 육아의 병행을 지원한다. 부모가 공동 휴직 시 급여 인센티브를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일하는 부모가 경력 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자녀 연령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기간도 최대 36개월까지 가능하게 한다.

주택 공급은 공공분양 3만호, 임대 3만호, 민간분양 1만호를 포함해 총 연 7만호를 공급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매 자금 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까지 대폭 완화한다.

다만 이런 '백화점식' 사업만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은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

이상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시스의 통화에서 "지금 저출산 정책의 답은 사업이 아니라 거버넌스(governance)다. 부처에서 하기는 힘들다"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본법 자체를 바꿔서 특별회계 또는 부처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구조 자체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책들이) 분절적이어서 예산 낭비도 많고 행정 편의적 정책도 많다. 돈을 쓰는데도 효과는 낮은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된 큰 그림과 그 안에서 조정 작업을 통해 개별 정책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현장과 수요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제도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의 사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한국은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긴 육아휴직(54주)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국제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은 13만1087명으로 여성

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남성 육아 휴직자(3만7885명)의 비율은 28.9%를 기록했다.

OECD에 따르면 여성은 배우자보다 더 긴 육아휴직을 쓰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남녀 임금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 '모성 페널티(motherhood penalty)'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육아 휴직제도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사용 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중소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생산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구조상 사각지대에 놓여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지금은 제도적 확장을 해야할 때가 아니라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 포럼에서 "기업에 (정책들이) 뿌리내리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정책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 문화를 바꾸고 직장의 가치를 설정하는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족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출은 OECD 국가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더 많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비 부담,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 정도의 예산은 역부족"이라면서 가족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보장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전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게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